

회보 편집위원장) 교수의 고마우신 노고의 산물입니다. 이 글을 빌어 한없는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희영 부기>

세 번 있었던 평화통일의 기회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명예교수 김 호 징

1. 우리의 아픔의 역사

한반도 정착민인 우리의 역사는 외침(外侵)에 의한 치욕의 역사로 점철(點綴)되어 있으며, 그 책임의 많은 부분이 우리 민족 자체에 있다. 미래에 보다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어가려면 과거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고 이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고려조(高麗朝) 때만 하여도 원(元)나라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태조(太祖) …, 인종(仁宗) 등등으로 이어왔던 왕조(王朝)가 그 명칭에 조(祖)나 종(宗)을 쓰지 못하고 충렬왕(忠烈王), 충선왕(忠宣王), … 충정왕(忠定王) 등으로 격하(格下)되어 원나라에 충성(忠誠)하고 공물(貢物)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가 되었다.

이 씨(李氏)의 조선조에서도 태조를 위시하여 역대 왕들이 명(明)나라에서 시호(諡號)를 받았다. 예를 들면 태조와 문종의 시호는 각각 강헌(康獻)과 공순(恭順)이었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남한산성에서 청태종(淸太宗)의 군대와 단 50일간 싸워서 패하고, 삼전도(三田渡)에서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로 치욕적인 항복을 한 16대 왕 인조(仁祖)는 청나라의 강요로 항복 장소에 대청황제공덕비(大清皇帝功德碑)를 세워서 후손에게 전해야 했다.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비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대청국 승덕 원년 겨울 12월에

어질고 너그럽고 그리고 온화한 성황제는 화평을 꾀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크게 성을 내어 위엄 있는 군사를 이끌고 내림하여 동녘을 향해 불붙듯이 진군하니 두려워서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다. 그 때에 우리의 임금은 남한에 자리를 정하고 두렵고 겁이 나서 봄 여름을 밝고 날 밝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내기를 50일, 동남 제도의 우리 군사들은 속속 격파되었고 서북방의 장군들은 산골짜기에 피해서 멀리 후퇴한 뒤에 한 걸음도 진격하지 못하였다. 성내의 양곡도 모두 떨어졌다. 그 때 청의 대군이 성을 탈취하기란 찬바람에 가을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일처럼, 화염에 깃털을 태우는 일처럼 쉬운 일이었다. 성황제는 살생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덕으로 여겨 전유(傳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 해서, 황지(皇旨)를 내려 깨우치기를 “항복해 오는 경우에는 옛처럼 온전케 할 것이나 항복하지 않으면 파멸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

그리고 16대 인조(仁祖) 이후 25대의 철종(哲宗)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왕들이 장목(莊穆)왕, 충선(忠宣)왕, 장각(莊恪)왕, 희순(禧順)왕, ..., 충경(忠敬)왕 등의 시호(諡號)를 청나라로부터 받는 신세가 되었다.

26대의 고종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1882년 중국으로 끌려가 3년을 지냈고, 1895년 10월에는 고종의 비(妃)인 명성황후가 왕궁 내에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시해(弑害)됐으며, 1896년 2월에는 고종 자신이 세자와 더불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1년간 피신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으로 청나라 군대가 일본군에 밀려 한반도에서 쫓겨나가자 1896년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 1897년에 서대문 근처에 독립문(파리의 개선문을 모방하되, 높이는 14m)을 세웠다. 26대의 고종(高宗)은 같은 해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 즉위식을 가졌다. 그러나 고종은 황제 즉위 8년 후인 1905년에 노일(露日)전쟁에 승리한 일본에게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외교권을 빼앗겼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청나라와 러시아의 영향력(影響力)을 완전히 몰아내었다. 그리고 1910년 (당시 인구 약 1,300만의)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합병되어 버렸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 2차 대전 패망 때까지 총독부(總督府)를 두고 우리를 지배했다. 천연자원이나 쌀, 그리고 노동력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까지도 빼앗겼고 전 배달민족이 사실상 노예민(奴隸民)으로 전락하였다. 일본인은 서울의 남산을 비롯하여 여러 도시에 신궁(神宮)과 신사(神社)를 지어놓고 조선 사람에게 참배를 강요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산의 조선신궁(朝鮮神宮)인데, 이는 한반도를 정복한 일본 명치천황(明治天皇)의 혼을 차려놓은 곳이었다. 즉 일본판(日本版) 삼전도(三田渡)의 비(碑)인 썸이다.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말을 만들어서 조선 사람의 자유와 권리는 뺏고 책임과 의무(병역의 의무, 징병)는 강요하였다. 일제의 총독부는 (1944년의 통계에 의하면) 13세 이상 조선 사람의 약 80%를 초등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는 문맹자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전체 인구 2,500만 중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1% 미만이었고, 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0.11%, 즉 3만 명에 불과하였다. 이 3만 명은 대부분이 일본사람 밑에서 중학교 교사, 총독부와 지방관청의 공무원, 의사, 변호사, 법원 서기, 언론사와 기타 회사 직원으로 일하였다. 모두가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선서(誓詞)를 암송하고, 궁성요배(宮城遙拜)를 하였으며 신궁과 신사를 참배하였다. 총독부는 고학력의 조선 사람일수록 사상 감시를 엄격히 하였다. 한때 독립운동을 열렬히 했던 인사들까지도 변절(變節)하거나 아니면 옥살이 중의 하나를 택하게 하였다.

해방 후 이러한 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3만 명의 고학력 엘리트(elite)는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초석(礎石)의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일제 말에 중학교의 ‘조선사람’ 교사들은 해방이 되자 대학의 강사나 교수가 되어서 후진 양성에 이바지하였다. 1945년 해방 당

시 이들의 최소 연령을 23세(전문학교 졸업 연령)로 친다면 2008년 현재 86세 이상이 되었을 것이고, (남자의 평균수명은 80세 이하이니) 따라서 이 분들은 거의 타계(他界)하였다. 이 분들의 제자들이 한강변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이 분들을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사람이 없지 않다.

2008년 현재 대한민국 국가(國歌)의 첫머리에 '동해물과 백두산' 이 나온다. 그런데 동해(東海)는 일본해(日本海)로, 백두산(白頭山)은 장백산(長白山)으로 둔갑하고 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오성홍기(五星紅旗)를 들고 떼 지어 폭력시위를 하여 한국 국민이 얻어맞는 일이 발생하였다.

일본으로부터의 해방도 배달민족 스스로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 특히 미합중국군의 희생과 미국의 원자탄에 의한 대일전쟁 승리로 얻어낸 것이다. 그리하여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된 후 단지) 7일간 대일전쟁에 참여한 소련과, 대일전쟁을 실질적으로 선도해서 많은 희생을 치룬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한반도에 38선을 사이에 두고 각각 군대를 진주시켰다. 그런데 두만강(豆滿江) 너머의 소련은 만 33세의 소련군 대위를 군함 Pukachev호에 태워 원산(元山)을 거쳐 평양(平壤)으로 데려와서, '김일성 장군' 으로 만들어 항일투쟁의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38선 이북 땅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하여, 기회가 오면 한반도 전체를 동유럽 소련군의 점령지대와 같은 위성국가로 키워가려고 하였다.

2. 첫번째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회

백성이 주인인 나라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원이나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려면

(가) 사상(思想) · 언론(言論) · 집회(集會) · 결사(結社)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이념의 사람들이 입후보할 수 있고,

(나) 치안(治安)이 확실히 유지되는 환경 아래서,

(다) 비밀투표(秘密投票)에 의한 보통(普通) · 평등(平等) 선거(選舉)를 하여야 한다.

물론 선출되는 대의원 수는 (평등선거의 정신에 따라서) 인구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 선거 방식은 1948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제18, 19, 20, 2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앞으로 공정자유선거(公正自由選舉)라고 부르겠다. 바꾸어 말하면, 이 공정자유선거는 사상 · 언론 · 집회 · 결사의 자유가 없고 비밀경찰이 투표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감시하는 독재국가, 즉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한반도에서 미래에 있을 평화적 통일도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에서 이 공정자유선거에 의하여 백성의 진정한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동서독(東西獨)과 남북(南北) 예멘은 최종적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서 통일되었다. 동유럽의 구소련 위성국가들이 모두 이 과정을 거쳐서 명실공히

독립하였으며, (2007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1/9이면서 세계 전 GDP의 6/9을 차지하는 선진 7개국(G7) 모두가 이런 선거를 한다.

1946년의 모스크바 삼상회의(三相會議)에서 결정된 한반도의 신탁통치(信託統治)안은 김일성을 제외한 모든 남북한의 일반 시민과 정치인들에 의하여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김일성과 소련군 당국은 북한에서 신탁통치 반대의 선봉에 선 조만식을 감금해 버렸다. 미국이 차선(次善)책으로 UN 총회에 제출한, 한반도 전역에서의 UN 감시하의 총선거(總選舉)안이 1947년 10월 14일 UN 총회 전체회의에서 43대 0으로 가결되었다. 그리하여 UN에 의한 공정한 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임시조선위원회(UN Temporary Committee on Korea, UNTCOK)가 조직되었다.

(1949년 5월 현재의 인구통계에 의하면 남한에는 2,000만, 북한에는 970만이 거주하였다. 이로 추정하면) 1948년 당시 남한에는 한반도 총 인구의 2/3 이상이 살고 있었으며, 북한에는 1/3 미만이 살고 있었다. UN 감시하의 선거는 물론 상술한 공정자유선거 방식이므로, 남한에서는 물론이고 북한에서조차도 김일성의 추종자가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은 없었다. 따라서 김일성의 권력욕(權力慾)과 소련의 (북한 의) 위성국화(衛星國化) 의도(意圖)와는 상치(相馳)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 상실을 뜻하는 공정자유선거 방식에 의한 평화적 통일에 관심이 없었다. 실제로 김일성·김정일 부자는 북한 땅에서 그 후 60년간 불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권력을 유지해 왔다. 소련군의 절대적 후원(後援)으로 이미 얻은 권력을 유지하고, 또한 무력을 써서라도 한반도 전역(全域)에 이 권력을 신장(伸張)하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 그리고 이 뜻을 '민족해방(民族解放, national liberation, NL)' 과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 people's democracy, PD) 혁명' 이라는 말로 포장(包裝)하였다. 여기서 참고로 남한의 1980년대의 학생운동권 단체에는 NL계와 PD계가 있었음을 지적해 둔다.

김일성과 소련 점령군 당국은 UNTCOK의 입북(入北)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전역에서 배달민족 유사(有史) 이래 처음 있을 공정자유선거에 의한 통일국가 형성의 기회를 놓쳤다. 그리하여 UNTCOK는 접근 가능한 38선 이남에서만 공정자유선거를 치르게 하였다. 이것이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 즉 5·10 선거였다. 이 5·10 선거는 김일성·박헌영의 (남한 내의) 추종자들이 방화·살인·관공서 습격 등으로 적극 방해하고, 김구·김규식·조소앙 등 과거의 독립유공자들이 (신탁통치는 환영하고, 한반도 전역에서의 총선거는 이미 거부한) 김일성과 더불어 '단독선거' 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남한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자발적으로 5·10 선거에 참가하였다.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의 2/3 이상인 2,000만 명이 사는 남한에서 유권자의 95% 이상이 등록하고, 90% 이상이 투표해서, 약 5대 1로 경쟁하는 후보자들 속에서 국회의원을 뽑았다. 실로 한반도 유사 이래 처음 있는 공정자유선거였다.

이 선거 결과는 첫째로 남한의 단지 5%(= 100%-95%) 미만의 유권자만이 선거를 거부한 김구·김규식·조소앙의 뜻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김일성·박헌영의 선동으로 살인·방화·습격을 했다는 증거이다. 둘째로는 북한에서도 UNTCOK의 감시 하에 공정자유선거가 이루어졌다

고 가정하여도, 김일성·박헌영의 추종자들은 최대 5%의 지지(支持)밖에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유추(類推)를 가능케 한다.

5·10 선거로 형성된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수립이 선포되었다. 흔히 1945년 8월 15일의 일본제국 패망의 날을 기념해서 8·15를 광복절(光復節)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하게는 연합군이 승리한 날일 뿐이다. 1948년 8월 15일은 배달민족이 공정자유선거로 백성의, 백성을 위한, 백성에 의한 나라를 세워, 명실공히 주권국가로 독립하고, (후일) UN으로부터 한반도에 있는 유일합법국가로 인정받게 된 날이다. 즉 8·15는 독립기념일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은 결코 무책임하고 무능하였던 고종(高宗)의, 그리고 단명(短命)의,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기(國基)를 이어받은 나라가 아니다. 또 하나 밝혀둘 것은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은 물론 개인 이승만(李承晩)의 나라가 아니고, 당시 배달민족 2,000만 남한 거주자가 주인인 나라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노동당이 지명한 한 사람의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관헌(官憲)의 감시하에 99% 이상이 참여하여 100%가 찬표(贊票)를 던지는 식의 선거, 즉 불법선거를 통해서 김일성(金日成)이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후일 김일성의 추종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을 같은 수평선 위에 올려놓고 대칭적으로 취급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신탁통치를 찬성하였던 김일성이 UN 감시하의 한반도 전역에서의 공정자유선거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38선 이북에서 그것도 불법선거로 1948년 9월에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 주민을 정당하게 대표하는 나라가 아니다. 단순히 김일성(金日成)의 나라일 뿐이다. 통일의 기회를 거부한 김일성은 대한제국 말(末)의 이완용과 같은 반민족(反民族)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김일성에게 남북 분단의 전적(全的)인 책임이 있다.

3. 김일성(金日成)의 난(亂)

본명이 김성주(金成柱)인 김일성이 일으킨 6·25 동란(動亂)을 필자는 김일성의 난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일성은 북한 주민으로부터 공정자유선거를 거쳐서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1912년 생인 그는 1941년 만 29세 때 소련 시베리아로 가서 소련군 대위가 되어 만 33세 때인 1945년 9월 19일 소련 군함 Pukachev호를 타고 원산항을 통해 귀국하였다. 같은 해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소련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훈장을 왼쪽 가슴에 달고, 소련 점령군 고위 장교들이 한 줄로 늘어서서 입회한 가운데 Ityzyatzev 대령(大領)에 의하여 '김일성 장군'으로 평양 시민에게 처음 소개되었다. 그리고 소련군의 후원으로 정치적 권력을 잡았다. 즉 당시의 김일성은 외세(外勢)인 소련의 괴뢰(傀儡)로 출발하였다.

(2) 소련과 더불어 UN 감시하의 한반도 전역(全域)에서의 공정자유선거를 거부한 그는, 1948년 2월에 이미 정규군(正規軍)인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다.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그는 공정자유선거에 의하여 북한 주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권력을 위임 받은 자가 아니었다. 그러한 그가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2,000만의 남한 시민이 손수 세운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두만강 너머의 외세(外勢)인 소련 정부와 결탁하여, 그들이 준 T-34탱크, '따발총', 대포, 야크전투기로 무장하게 하고, 소련의 군사고문인 Vasiliev 중장이 만들어 준 '선제공격작전계획'에 따라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38선을 넘어 인민군을 남침하게 하였다. 전직이 소련의 군인이었고, 그들의 괴뢰(傀儡)에 불과한 젊은이가 권력 확장을 목적으로 외세를 업고 2,000만 배달민족을 상대로 무장 반란(叛亂)을 일으킨 것이다. 전(全) 배달민족의 영광과 번영을 지향하는 통일전쟁은 결코 아니었다. 통일을 진정(真正)으로 원했다면 UN 감시하의 공정자유선거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그리하여 UN은 김일성의 남침공격을 UN 헌장(憲章) 위반으로 보고 김일성 군대의 38선 이북으로의 즉각 철수를 결의하였으나 김일성이 이를 묵살하였다. 그리하여 UN은 16개국 군대로 편성된 UN군을 조직하여 대한민국을 군사력으로 보호하려 했다. 일단 철수했던 미군은 UN군의 일원으로 다시 한반도에 돌아왔다. 결국 김일성은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일단 철수한 미군을 한반도에 다시 불러들인 원인 제공자였다. 이 민족상쟁(民族相爭)의 전란으로 배달민족 200만 명이 이상이 죽었다(대영백과사전).

(3) UN의 공식 기록과 세계에 공개된 러시아 정부 문서보관소의 기록들, 그리고 공신력(公信力) 있는 많은 역사기록들이, 김일성 군대의 기습 남침으로 1950년의 6·25 전란이 시작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김일성·김정일 부자는 대를 이어가면서 “미제(美帝)의 38선 북침(北侵) 도발(挑發)에 의한 전쟁(戰爭)이었다”고 우리 민족 전체를 기만(欺瞞)하였으며, 지금도 김정일의 관제(官製)언론과 김일성이 남긴 판문점의 비석은 이 거짓말을 광고하고 있다.

4. 두 번째 평화통일의 기회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김일성의 난(亂)의 특징은 전선(戰線)이 여러 번 바뀐 전란(戰亂)이었다는 것과, 러시아 제국의 후신인 소련의 공군(空軍)과 청나라의 후신인 중공(中共)의 지상군이 김일성의 반역전란에 직접 개입해서 그를 도움으로써, 한반도의 공정자유선거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난 초기에 김일성의 반역군은 소련제 T-34탱크를 앞세우고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을 휩쓸었다. 그러나 국민 자신들이 주인인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호국(護國)의지(意志)와 UN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역전되었다. 1950년 9월 중순 인천에 상륙한 대한민국 국군과 UN군은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넘어 북진하여 갔다. 앞장섰던 한국군은 1950년 10월 하순에 압록강변의

초산(楚山)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김일성 정권의 종말이 곧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였다. UN 총회에서는 1950년 10월 7일, 앞으로 있을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북한지역에서 공정자유선거를 감시하고 전화(戰禍)를 입은 한반도 전역의 재건(再建)과 경제부흥을 도울 UN 한국통일부흥위원단(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construction of Korea, UNCURK)의 구성 결의안을 47대 5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UN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1950년 10월 9일 김일성에게 즉시 항복할 것을 권유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UN과 협조하여 한반도에 통일독립민주국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할 것을 당부'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때 김일성이 항복하고 압록강을 넘어 중국이나, 또는 두만강을 넘어 소련에 망명(亡命)하였더라면 한반도는 공정자유선거에 의하여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UN군의 일원이었던 미국군도 철수하였을 것이다. 이때가 바로 두 번째의 공정자유선거에 의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회였다. 그런데 김일성은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끼리 공정자유선거를 거쳐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일성이 원했던 것은 절대 권력의 유지와 신장(伸張)뿐이었다.

김일성은 이때만 하더라도 주체(主體)나 자주(自主)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 전이었다. 소련의 스탈린에 대한 그의 절대적 의존과 종속(從屬)성은 당시의 전보문(電報文)에 사용된 말들이 사실적(寫實的)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하여간 김일성은 또 다시 외세를 불러들여서 통일을 방해하였다. UN군의 선봉으로 한국군이 압록강변에 도달하자 중공(中共)의 막대한 지상군과 미그(MIG) 전투기를 지닌 소련의 공군을 한반도에 불러들였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영토(領土)인 북한 땅과 영공(領空)인 북한 하늘에 외국군이 침입한 것이다. UN이 한반도에서 유일합법국가로 인정한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을 침해한 것이다. 결국 소련이나 중공은 한반도에 공정선거에 의한 평화적 수단으로 통일독립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침략자들이었다.

2008년 현재 북한의 핵을 다루는 육자회담(六者會談)에 과거의 한반도 침략국들인 중(中) · 로(露) · 일(日)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의 통일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뜻한다.

5. 세 번째 평화통일의 기회

막대한 수의 중공 지상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전선은 다시 남하하였고, 현재의 휴전선 근처에서 교착상태에 들어갔다. 그 후 스탈린의 사망에 의한 국제정세의 변화 등도 있고 해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調印)되었다. 그리하여 포화(砲火)는 멎었다.

휴전협정 제4조 60항에는 서명한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책임자들에게 상신(上申)하여 한

반도의 통일문제를 정치적 회담을 통해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를 근거로 해서 1954년 봄의 제네바 회담에 한국 문제가 상정되었다. 제네바 회담에서 미국을 비롯하여 UN군 참전국 대표들은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 변영태(卞榮泰)가 제안한 '자유선거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먼저 침략자인 중공의 지상군이 북한 땅에서 철수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정한 다음에, 한반도의 남북 지역에서 토착인구에 비례하는 수(數)의 대의원을, UN 감시하에 공정자유선거에 의하여 선출해서 통일국가를 세우자'라는 요지의 안(案)에 합의하고 이를 소련·중공·김일성정권 대표들에게 공동으로 제의하였다. 이는 요컨대 1948년 5월 10일에 (김일성의 반대로 부득이) 남한에서만 실시되었던 공정자유선거를, 한반도에 불법으로 침입한 중공군이 철수한 다음에 UN 감시하에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 공정자유선거 방식은, 1948년에 자칭 요인(要人)들인 김일성·박헌영과 김구·김규식·조소앙이 맹렬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총 유권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압도적 다수인 95%가 자발적으로 등록해서 (즉 동의해서)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채택(採擇)한 방식이다. 이때까지만해도 남북한의 경제적·문화적 양극화가 덜 진행되었으므로, 이 방식은 북한 땅에서도 자유 분위기만 조성되면 주민의 압도적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이었다.

김일성 정권을 대표해서 참석한 남일(南日)은, 남한 유권자의 최대 5% 미만의 동의 밖에 얻지 못하였던 1948년 4월 평양에서 있었던 소위(所謂) '요인(要人)공동성명서'의 내용을 되풀이하였다. 즉 한반도에 있는 모든 외국군을 철수케 하고, 남북한이 전(全) 한국위원단을 공동으로 조직하여 이 위원단으로 하여금 통일문제를 논의·추진케 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보기에 김일성은 북한 주민의 (공정한 선거로 선출된) 진정한 대표가 아닐 뿐 아니라, 이미 2,000만 명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반역의 난을 일으켜서 배달민족 200만 명 이상을 희생시킨 민족 반역자였다. 그리고 불법 권력의 신장(伸張)에 실패하니까 다시 후견(後見) 외세(外勢)인 소련군과 중공군을 두만강과 압록강 바로 건너에 대기(待期)시켜 놓고, 이미 공정자유선거로 남한의 2,000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UN군을 바다 건너로 쫓아내고, 우리끼리 만나서 통일 논의를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김일성은 불법으로 쟁취한 권력을 무슨 이유로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그 후 60년간 김일성-김정일의 제국(帝國)을 북한 땅에 유지해 왔다. 결국 한국 문제를 다룬 제네바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조국 평화통일의 세 번째 기회는 김일성 때문에 이렇게 사라졌다.

6. 김일성·김정일이 이룩해 놓은 북한

김일성은 북한 땅에서 자신의 정치권력 유지를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기회를 세 번이나 방해하고, 인권유린과 불법선거로 60년간 부자(父子)가 대를 이어 절대 권력을 유지해왔다.

Democide(정권에 의한, 정치적 이유로 인한 대량 살인) 라는 신조어(新造語)를 만들어낸 정치학자 R. J. Rummel의 면밀한 조사에 의하면, 김일성은 1948년부터 1987년 사이에 160만 명 이상의 우리 민족을 전쟁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살해하였다고 한다. 김정일은 식량을 정부가 배급하는 북한 땅에서 1990년대 후반에 200만 명 이상의 주민을 굶어 죽게 하였다. 결국 김일성-김정일 부자는 배달민족 구성원 중에서 도합 500만 명 이상을 전쟁·정치적 살인·기아(飢餓)로 죽인 셈이다.

세계의 비정부단체(NGO)들이 2006~2007년에 조사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실체(實體)는 다음과 같다.

(가) 인권 상태가 192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192위(Freedom in The World 2007, Freedom House).

즉 백성의 인권이 가장 유린되는 폭정의 나라임을 뜻한다.

(나) 민주주의 지표(指標)가 167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167위(Democracy Index 2006,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즉 세계 제일의 독재국가임을 뜻한다.

(다) 언론 자유가 195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195위(Freedom of The Press 2007, Freedom House).

즉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나라임을 뜻한다.

(라) 경제적 자유가 157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157위(Index of Economic Freedom 2007, The Heritage Foundation and The Wall Street Journal).

즉 엄격한 통제경제로서 생산시설 대부분이 국유 또는 공유되어 있고, 농업은 협동농장제로 경영된다.

(마) 총체적 자유가 159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159위(The 2006 State of World Liberty Index, The State of World Liberty Project).

즉 백성의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이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통계(World Factbook)에 의하면 2007년에 김일성-김정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인당 GDP(ppp)는 1,800달러이고 대한민국의 그것은 24,500달러이다. 즉 삶의 질이 지극히 열악(劣惡)한 나라이다. 위에 열거한 지표(指標, index)만 보면 김일성-김정일 정권은 Myanmar의 군사정권이나 아프리카의 Zimbabwe보다도 열등하다. 그리고도 김일성은(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영원한 주석으로서, 평양의 금수산궁전의 방부처리된 관 속에 누워 있다.

7. 맺는 말

대자연은 언제나 구속 상태에서 자유스러운 상태로 저절로 변화해 간다. 현대의 열역학(熱力學)에서는 이를 '고립계(isolated system,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이 없는 계)에서는 엔트로피(entropy)의 증가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저절로 변화해 간다' 라고 표현한다. 인류의 역사도 Hegel에 의하면, '구속에서 자유로'의 변화라고 한다. 실제로 Magna Carta, 미국의 독립, 프랑스혁명 등은 구속에서 자유로의 변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자유, 평등, 박애를 기초로 하는 인권(人權)은 인간에게 천부(天賦)의 것' 이라고 명시(明示)한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1948년의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그 후 1990년을 전후해서 Poland, Hungary, Czechoslovakia, Rumania, Bulgaria, East Germany, Russia, Ukraine, Albania 등이 자유의 나라가 되었다. 중국도 덩소평(鄧小平)의 '백묘흑묘(白貓黑貓)' 로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였으며, Vietnam조차도 '도이모이' 로 개방을 하였다.

현재 한반도에는 남쪽에 5,000만 명의 주민이 주인이며 인권이 보장되고 2007년의 일인당 GDP(ppp)가 북한의 약 14배인 대한민국이 있으며, 북쪽에는 인구는 2,300만 명이며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소련·중공의 외세 도입과 부정선거와 인권유린을 수단으로 60년간 독재 권력을 유지해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 그런데 김정일은 남한에서 쌀과 비료를 받아가는 처지 이면서, 조선로동당 규약에 있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내세워 '미군을 한반도에서 내 쫓고, 대한민국을 전복(顛覆)하고 통일하겠다' 고 110만의 군대와 원자탄·생화학무기를 갖추고 호시탐탐(虎視眈眈)하고 있다.

우리의 선조(先祖)들이 이 땅에서 겪었던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삶의 질(質)이 높은 부강(富強)한 통일 국가를 한반도에 만들어야 한다. 높은 삶의 질(質)은 인권이 보장되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나라에서만 성취(成就)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항구적(恒久的) 독립과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통일국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1. 북한 땅에서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구조개혁(perestroika)을 하고, 정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提高)하는 개방(glasnost)을 하여 백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2. 북한 땅에서 공정자유선거에 의하여 입법부 대의원과 행정부 수반이 선출되고,
3. 남한의 도움을 받아 북한 땅에서 삶의 질을 높여 일인당 GDP가 남한의 그것과 비슷하게 되고, 또한 사회적 및 문화적 이질성이 해소되면,
4. 남북의 정부 대표가 상의해서 한반도 전역에서 토착인구에 비례하는 대의원을 공정자유선거로 선출하고 통일국가 입법부를 형성하여 헌법 제정을 하고, 국가행정수반을 선출하는 순을 밟으면 된다.

이 과정은 부작용의 극소화를 위해서 점진적(evolution)일수록 바람직하며, 급진적

(revolution)으로 달성하려면 실패하기 쉽다.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외세(外勢), 특히 약 60년 전의 김일성의 난(亂) 때 침략의 전례(前例)가 있는 중국의 간섭을 사전에 봉쇄하여야 한다. 현재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국세(國勢)가 신장되고 있는 중국은 동북공정 등으로 영토적 야심을 노출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티베트 사태를 그 때문에 악화시키고 있다. 하나의 방법은 한반도의 지리적 접경국(接境國)들인 중국·러시아·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먼 곳의 강국인 미국과의 군사동맹(遠交近攻의 策으로 以夷制夷)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자신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비우호적(非友好的)이며 인구가 도합 100배 이상인 주변의 아랍국들 사이에서 독립과 번영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땅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상태로의 변화는 김정일의 자의(自意)이건 또는 타의(他意, 하늘의 뜻에 의한 자연사를 포함)에 의한 것이건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소멸(消滅)을 뜻한다. 즉 북한 땅에서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소멸(消滅) 없이는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때 김신조 일당을 보내 그를 시해하려고 했던 김일성은 이후락(李厚洛)의 방북으로 7·4 공동성명을 하여 평화스러운 미소를 지은 직후, 휴전선 밑에 남침용 땅굴을 팠다. 미얀마의 아웅산 묘지에서 대한민국의 고위관리들을 폭사(爆死)시켰으며, 88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동포가 탄 KAL기를 김현희로 하여금 동남아 바다 상공에서 폭파 수장시켰다.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 15만 명 이상의 우리 동포를 가두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우리 민족 200만 명 이상을 굶어죽게 하였다. 김일성-김정일 부자는 신뢰할 수 없는 가혹한 독재자들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4년에 ‘김일성과의 협의는 (Chamberlain-Hitler의) Munich 회담과 같은 것’이라고 간파(看破)하고 제네바 회담에 나가 있는 변영태 외무장관을 불러들였다. 독재자에 대한 유화정책(宥和政策, appeasement)은 금물(禁物)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에게 상기(想起)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의 아들 세대(世代)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돈을 써들고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을 만나고 왔다. 노벨평화상위원회는 남북의 화해(和解)에 기여했다고 김대중에게 노벨상을 주었으며, 김대중은 김정일이 자신과 같이 노벨상을 받지 못한 것을 (기자회견에서) 아쉬워했다. 김정일은 그 직후, 남북한이 1991년 12월 31일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으로 이룬 약속을 어기고 원자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승만의 손자 세대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퇴임을 서너 달 앞두고 김정일을 찾아가서 ‘북한 주민을 위하여 오래오래 사시라’고 찬송(讚頌)의 말을 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내의 친(親)김정일 정치가들과 더불어, 평화통일의 걸림돌인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수명(壽命) 연장(延長)에 기여한 셈이다.

우리가 2008년 현 시점(時點)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대한다면,

1. 평화적 수단에 의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인권보장(人權保障)·법치(法治)·권력 분립(權力分立)을 국기(國基)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국가 수립에 한반도 통일의 목표를 확

실하게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 참조)

2. 배타적(排他的)이고 폐쇄적(閉鎖的)인 독재정권과 개방된 자유민주주의정권의 영구적인 평화공존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민족(ein Volk)에 의한, 하나의 나라(ein Reich), 즉 통일국가에서는 공정자유선거로 정당하게 선출된 사람만이 통치 권력을, 법에 따라서(法治), 그것도 법정기간 동안만 행사하여야 한다. Hitler와 같은 독재자를 하나의 지도자(ein Führer)로 섬겼던 독일은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3. 자라나는 후세에게 과거사를 왜곡(歪曲) 없이 가르쳐야 한다. 이미 왜곡된 역사에 의하여 세뇌(洗腦)된 사람들의 계몽(啓蒙)을 서둘러야 한다.
4. 김일성·김정일의 정권과,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인 북한 주민을 확실히 구별(區別)하여야 한다. 우리가 주는 쌀은 군량미(軍糧米)로, 질소비료는 (가공 후) 폭약으로 전용(轉用)될 수 있다.
5. 우리는 우리의 변영의 원동력이었으며, 백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 (가) 선군(先軍)정책을 쓰는 김정일의 정권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김정일의 오판(誤判)을 사전에 예방(豫防)하여야 한다.
 - (나) 국가보안법을 사문화(死文化)하지 말고 이 법(法)의 집행(執行)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와 대칭적으로 잘못 인용되는 북한의 가혹한 형법(刑法)은 김정일의 독재 권력을 유지 보호하는 것이다.
6. 중국의 잠재적(潛在的) 간섭을 예의(銳意) 주시(注視)하고, 대책을 사전에 세워두어야 한다. 그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방해한 전례(前例)가 있다.
7.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서둘지 말고 느긋하게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내실(內實)을 온 국민이 합심해서 다져 나가야 할 때이다.

지구 온난화 단상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김 준 호

머리글 - 난폭해지는 기후

지난 3월의 지구 평균 기온은 129년 만에 가장 더웠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 숫자가 아니더라도